

오кина와의 역사체험과 ‘비무(非武)의 평화’ 사상*

나미히라 쓰네오(波平恒男) 류큐대학

이 글은 오кина와(沖繩)의 역사체험과 그것이 만들어낸 ‘비무(非武, 반군사주의)’에 의한 평화의 실현 사상에 대해 논한 것이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먼저 과거 ‘류큐(琉球)처분’이라고 불려온 1879년 일본으로의 오кина와 병합 사건을 ‘류큐병합’(류큐 왕국의 병합)으로 재인식하여, 지금까지 ‘병합(처분)하는 측’[=메이지(明治) 정부의 시점]을 중심으로 고찰되고 해석되어 온 역사적 사실을, 이를테면 ‘병합되는 측’의 시점으로 재평가하는 데 있다. 그다음 문제의식은 류큐병합을 동아시아 근대의 거대한 변동 속에 적절히 자리매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 즉 예로부터 내려온 중화제국중심의 국제질서에서 근대 일본의 식민지제국으로의 진출(신구제국의 교체)이라는 맥락으로 본다면 일본에 의한 ‘두 병합(류큐병합과 한국병합)’은 매우 유사한 사건이었다는 통찰이 가능해진다. 오кина와는 제주도도 매우 닮았다고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자의 현대사까지 관통하는 일련의 고난과 역압은, 한국전쟁을 비롯해 냉전이 가져온 동아시아의 다양한 분단 상황, 더 나아가 최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전략 재편 문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다.

오кина와에서는 류큐 왕국이 ‘예의바른 나라’이며 ‘비무의 문화’를 가진 국가였다는 인식과 그것을 근거로 여기는 역사관이 정착되어 있다. ‘류큐처분’을 통해 메이지 국가로 편입된 이후 일본으로의 ‘동화’, 그 힘든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오кина와 사람들에게 강요된 ‘차별’과 ‘배제’의 체험이 섞여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오кина와외전 체험, 전후의 미군통치와 복귀운동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생산되어 왔다. 최근 일본 정부는 헤노코(辺野古) 바다를 매립하는 본격적인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오кина와는 또 한번 큰 기로에 서 있다. ‘분쟁과 평화의 기로’, 그 최종적인 위기 국면에 내몰렸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본토의 양심적인 국민, 해외의 지식인이나 군사주의 극복을 통해 평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오кина와를 이해하고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주제어 오кина와, 류큐병합, 비무(非武)의 사상, 역사체험, 군사기지

* 이 글은 “오кина와가 이어가는 「비무의 안전보장」사상(「非武の安全保障」思想)”(阿部浩己·島袋純 編), 『오кина와가 묻는 일본의 안전보장(沖繩が問う日本の安全保障)』(シリーズ日本の安全保障・第4巻, 岩波書店, 2015년)에 수록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번역: 다무라 후미노리/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

I. 들어가며

이 글은 오키나와(沖縄)의 역사체험과 그것이 만들어낸 ‘비무(非武, 반군사주의)에 의한 평화의 실현이라는 사상에 대해 논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오키나와의 오랜 역사와 그것을 둘러싼 오키나와 사람들의 집합적 기억,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이 민중 사이에서 키워 낸 평화지향과 평화주의의 심성에 대해 개괄적인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¹ 그러나 동아시아의 분단 상황을 만들어 내고 고착화시킨 ‘냉전’의 시대와 21세기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냉전기 이후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다루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실제로 거론해야 할 많은 사안을 전부 끌어안지 못하고 지극히 한정해 고찰하고 있음을 먼저 밝혀둔다.²

2014년에 필자는 오랜 연구성과로서 『근대 동아시아사 속의 류큐병합: 중화세계 질서에서 식민지제국 일본으로(近代東アジア史のなかの琉球併合: 中華世界秩序から植民地帝国日本へ)』를 간행했다(波平恒男, 2014). 이 책에서는 근대 일본에 의한 류큐(오키나와)병합과 조선의 병합(한국병합)과의 유사성, 그리고 그 관련성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하나의 큰 테마였다. 이 연구는 크게 나뉘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종래 ‘류큐처분’이라고 불려온 1879년 일본으로의 오키나와 병합 사건을 ‘류큐병합’(류큐 왕국의 병합)으로 재인식했다. 이는 지금까지 ‘병합(처분)하는 측’(메이지(明治) 정부의 시점을 중심으로 고찰되고 해석되어 온 역사적 사실을, 이를테면 ‘병합되는 측’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데 있었다. 즉, 류큐·오키

¹ 이 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참고가 될까 싶어 간단히 필자 소개를 하고자 한다. 나(부모님을 비롯한 조상대대)는 오키나와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모교인 류큐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지금까지 고향에서 살고 있다. 다시 말해 나는 우치난추(ウチナンチュ, 오키나와인) 토박이이며, 대학에서는 정치학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을 담당하면서도 고향이며 생활 터전이기도 한 오키나와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늘 고민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적 배경은 이 연구의 고찰에 나름대로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동시에 편견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² 이 글의 그러한 한계는 주로 이전 원고가 『오키나와가 묻는 일본의 안전보장』 외의 공저자들과의 분업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필자의 현대사 지식이 부족했던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오키나와의 보다 현대적인 여러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는 이 책을 참조하여 이 글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바란다.

나와 입장에서의 관점을 적절히 적용함으로써 종래의 역사인식에 자리잡았던 일본중심사관을 상대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역사상으로 정정하고 보정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의식이었다. 그다음 문제의식은 근대 동아시아에서의 커다란 변동 속에 류큐병합을 적절히 자리매김하여 고찰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맥락, 즉 예로부터 내려온 중화제국중심의 국제질서에서 근대 일본의 식민지제국으로의 대두(신구제국의 교체)라는 맥락으로 본다면, 일본에 의한 '두 병합'(류큐병합과 한국병합)은 매우 유사한 사건이었다는 통찰이 가능하다. 졸저의 그와 같은 발상과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 조선·한국의 근대사는 나의 오랜 관심사였으며 그에 관한 연구도 축적해 왔다. 그러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현대사나 '냉전'을 둘러싼 국제관계사에 관한 나의 지식은, 유감스럽게도 빈약하고 깊이가 없다.

이처럼 앞서 언급한 『근대 동아시아사 속의 류큐병합』에서는 근세 및 근대의 오키나와(류큐)와 조선(한국)과의 유사성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에 대해서도 오키나와와 한국·한반도에서의 역사체험의 밀접한 관련성을 다양하게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흥미롭게도 오키나와는 제주도와의 매우 닮았다고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 지적이 자연이나 전통문화, 관광이나 경제와 같은 차원에만 한정된 것은 아닌 듯하다.

이 글의 논의에서는 오키나와인 특유의 아이텐티티라는 논제가 등장하는데, 이와 같은 집합적 자의식을 키워낸 배경이 된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와의 관계는, 제주와 한반도 본토와의 관계와 매우 닮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양쪽 모두 중앙정부로부터 오랫동안 홀대 받아 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 또다시 새로운 난관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된다. 최근에는 제주가 광범위한 자치권을 획득하여 오키나와가 갈구하는 자치권 확대의 하나의 선진적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이 계획되고 결국 공사가 강행되면서 민중의 평화지향과 군사기지 부담과의 모순이라는 점에서도 제주가 '오키나와를 닮아간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로 지적되어 왔다. 아무튼 이와 같은 양자의 현대사까지 관통하는 일련의 고난과 역압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전쟁을 비롯해 냉전이 가져온 동아시아의 다양한 분단 상황, 더 나아가 최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전략

재편 문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필자의 지식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 글의 고찰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각국의 국제 환경이나 최근 들어 나타나는 많은 변화까지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밝혀 둔다.

II. 오키나와인 아이덴티티와 평화·자치의 희구(希求)

1. 역사의 기억과 아이덴티티

현재의 오키나와에는 과거 류큐 왕국이라는 독자적인 국가가 존재했다. 1420년대에 류큐열도의 중심을 이루는 오키나와 섬을 통일한 류큐 왕국은, 1609년 사쓰마(薩摩)의 시마즈(島津)에게 침략을 당하고, 1879년에는 류큐병합(류큐처분)으로 일본에 편입되어 오키나와 현이 되었다. 그로부터 66년이 지난 1945년 오키나와는 미일 양군의 치열한 지상전투(오키나와전)의 결전장이 되었고, 미국의 승리로 전쟁이 끝난 후에는 27년간이나 미군정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1972년 일본 복귀(시정권 반환)로 지금의 오키나와 현이 부활되었다. 지금도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신들을 우치난추(오키나와인)라고 부르고, 오키나와 이외의 일본(본토) 사람들을 야마톤추(야마토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배경에는 위와 같은 오키나와가 거쳐 온 독자적인 역사와 그 역사체험을 둘러싼 오키나와인의 집합적 기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나 문화의 독자성을 이야기할 때, 과거 류큐 왕국이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평화외교와 해상무역을 왕성히 펼치고 번영했다는 것을 자주 언급한다. 그 기념비라고도 할 수 있는 '만국진량의 종(万国津梁の鐘)'(1458년 주조)에 새겨진 명문(銘文)에, 이 나라의 이념과 자부심이 "선박을 항해하여 만국의 진량(가교)이 되고 외국의 산물과 보배는 온 나라에 가득하다."(원문은 한문)라고 구가되고 있는 것은, 오키나와 사람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다. 실제 이 범종이 주조된 15~16세기경 류큐는 중국, 조선, 일본 외에 널리 동남아시아 지역의 나라들과도 이들 지역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지정학적 이

점을 살려, 국내의 평화로움에 힘입어 해상중계무역을 전개하면서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번영을 누렸다고 한다.

오키나와에서는 류큐 왕국이 '예의바른 나라(守禮の邦)'이며 '비무의 문화'를 가진 국가였다는 인식과, 그것을 근거로 여기는 역사관이 정착되어 있다. 물론 류큐에서도 통일왕권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각지를 다스렸던 호족(아지, 按司)들에 의한 무력충돌이 있었고, 통일왕권체제 확립 이후에도 무기를 사용한 전투의 사례는 어느 정도 존재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왕국이 전성기를 이룬 쇼신(尚眞) 왕(1477~1526) 시대에는 국내의 치안유지를 위해 각지의 아지 세력이 보유한 무기류를 압수하여 국가가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군비철폐 정책이나 1609년 사쓰마의 시마즈에 의한 침략, 그리고 그 후의 무구통제책(武具統制策) 실시 등을 거치면서, 류큐 왕국은 '비무'를 특징으로 삼은 국가가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19세기 초반 서양 여러 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 비무의 왕국은, 근대에 들어서자마자 천황제 국가인 일본에 강제적으로 병합되었다. 이후 일본(본토)과의 '동화' 과정을 거치고,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오키나와전투의 결전장이 되면서, 과거 '비무의 섬'이었던 오키나와는 비참한 '전쟁의 섬'이 되고 말았다(明田川融, 2008). 이처럼 오키나와 근대사에 있어 가장 불행했던 지상전에서, 당시 주민의 4분의 1이 전사했고, 그때까지 열심히 쌓아 온 생활기반이나 문화재의 거의 대부분이 파괴당한 것을 비추어볼 때, 오키나와는 군사기지를 두는 데에 가장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치열했던 지상전에 휩쓸린 결과, 전후에도 미군 통치 아래 많은 군사기지가 건설되고(平良好利, 2012), 또한 1972년 일본으로의 복귀 후에도 미군기지와의 공생이 강제되면서,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에서 전장과 가장 가까운 곳'(吉田敏浩, 2012) 이라고 형용되는 실정이다.

2. 평화와 자치(자기결정권)의 희구

자세한 역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다음 절 이후에서 살펴보겠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현대의 오키나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오키나와전투나 그 후의 미군 통치, 나아가 복귀 후에도 계속된 기지로 인한 피해 등, 전후 많은 고난을 겪은

결과 군사주의를 강하게 거절하는 사상과 심성을 키워왔다는 점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류큐 왕국의 ‘비무의 문화’라는 전통이나, ‘대교역시대(大交易時代)’의 평화국가에서 긍지를 찾아내는 아이덴티티를 키워왔다는 것이다.

오키나와인의 아이덴티티를 논할 때, 그 핵심에는 주로 ‘평화’와 ‘자치’(자기결정권)에 대한 희구가 있다고 언급된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평화를 강하게 희구해 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아이덴티티에 기반해 자신의 향토사회를 구축하는 자기결정의 권한이 오랫동안 제약되어 왔기 때문이다. 1609년 벌어진 사쓰마 시마즈에 의한 침공이나, 특히 1879년 행해진 류큐병합(류큐처분)은 류큐·오키나와 사람들이 ‘자기결정권’을 상실하는 커다란 계기가 된 사건으로서 오키나와 사람들의 역사인식에 깊게 새겨져 있다.

사쓰마의 침공과 일정한 지배를 조건으로 한 메이지의 류큐병합(류큐처분)이 있었고, 그 후에 추진된 동화·황민화의 한 귀결로서, 군인보다 많은 일반시민 희생자를 낸 오키나와전투의 비극이 있었다. 그리고 오키나와전투에 이어 미군에 의한 직접적인 점령과 기지 건설이 이어지면서, 27년이라는 세월을 미군 통치에 의한 다양한 인권침해를 겪어왔다. 일본 복귀 후에도 미군기지의 집중이나 일본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체제의 모순이 오키나와에서 발현되면서 차별적 정책이 이어졌다(新崎盛暉, 2012). 이처럼 오키나와의 역사는 본질적 차원에서 마치 앞의 불행이 이후의 불행을 낳는 것처럼 ‘고난의 연쇄’라는 양상을 보여줬다. 그리고 오키나와의 주민은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이러한 류큐·오키나와의 역사와 대조하면서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사이에 집합적인 역사의식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사회적으로 공유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사슬’을 끊고 ‘평화’, 즉 ‘비무’를 핵심으로 한 자신들의 집합적 아이덴티티에 맞게 향토의 생활세계를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자치 또는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회복을 추구해 왔다. 다음 절부터는 이러한 오키나와인의 아이덴티티의 핵심을 이루는 ‘평화’와 ‘자치’의 희구라는 두 가지 계기 중 주로 전자에 초점을 두고, 오키나와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체험이나 향토의 역사를 반추하는 과정에서 조성해 온 평화주의=반군사주의 사상, 그리고 심성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III. 류큐 왕국과 '비무'의 전통

1. 통일 왕국의 탄생과 해외 교역

류큐 열도의 중심을 이루는 오키나와 섬에서는 12~13세기 무렵부터 아지라 불리는 호족이 구스쿠(グスク, 성)를 거점으로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14세기에 들어서자 그중에서 난잔(南山), 추잔(中山), 호쿠잔(北山)이라는 세 세력이 대두해 세력다툼을 벌인 후, 1420년대에 추잔의 삿토(察度)가 산잔(三山)의 통일을 이룩하면서 류큐의 통일왕권체제가 형성되었다.

류큐 왕국은 성립 당시부터 중국 대륙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산잔 분립 시대에는 성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명나라와 활발하게 조공(진공)무역을 하고, 곧이어 추잔의 왕이 명나라 황제에게 책봉을 받아, 류큐도 동아시아의 중화세계 질서(중화제국체제)에 뛰어들게 되었다.

류큐가 산잔 분립 시대에서 통일로 향한 14세기에서 15세기 초는 동아시아가 커다란 변동기를 맞이했던 시기였다. 중국 대륙에서는 몽골민족 왕조였던 원나라가 쇠퇴하고, 1368년 주원장(명태조 홍무제)이 한족의 왕조인 명조를 세웠다. 명나라는 건국 직후부터 고대 중국에서 이어지는 전통적 화이질서(책봉조공체제) 재건에 나서, 주변 여러 국가와 민족에 대해 신하의 예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류큐가 산잔 분립의 말기였던 1372년, 홍무제가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칠 것을 촉구하자 추잔의 삿토가 이를 따랐다. 이것이 류큐와 중국의 약 500년간에 걸친 조공 관계의 시작으로, 추잔에 이어 난잔과 호쿠잔도 조공무역 관계를 맺었다. 또한 1404년 추잔의 왕이었던 부네이(武寧)는 명나라 성조(영락제)에게 삿토였던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하고 자신에 대한 책봉을 요청했다. 명나라 성조는 이에 부응하여 삿토에게 유제사(諭祭使), 부네이에게 책봉사 등을 보냈다. 이것이 중국 황제에 의한 류큐 국왕(류큐국 추잔 왕)에 대한 책봉의 시작이었다.

같은 시기, 한반도에서도 고려왕조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큰 변동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1392년 조선이 창건 직후부터 명나라와 조공 관계를 맺고, 1401년에는 태종이 명나라 황제로부터 조선 국왕으로 책봉을 받았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아시카가(足利) 씨에 의한 무로마치(室町) 막부(幕府)가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다. 1392년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의 손자 요시미쓰(義満)는, 남북조(南北朝)를 통일하여 아시카가 쇼군(將軍)의 권력 아래 전국 지배를 완성했다. 또한 명나라와의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 명나라 황제에게 조공하여 ‘일본 국왕’으로 책봉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관계는 오랜 일본 역사에서도 예외적이었다.

서두에서도 간략히 언급한 것처럼, 이 시기의 류큐 왕국은 명나라와의 조공무역을 기축으로 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나 지역들과 활발한 해상교역을 펼쳤다.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중화세계질서의 재건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행해진 해금정책으로 인해 류큐는 해역의 안전과 무역 활동에 유리한 여러 조건을 구비하게 되었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잇는 해상무역 중계지 역할을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15~16세기에 걸쳐 전개된 ‘대교역시대’야말로 류큐사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시기로 여겨져 왔다.

이와 같은 해상교역 국가로서 류큐 왕국의 기초적 요건 획득은, 중화제국인 명나라와 종속(宗藩, 宗藩)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관계는 류큐 왕국에 평화와 번영,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종주국인 명나라에도 큰 이득이 있었다. 명나라는 자국민에 의한 사적 무역을 통해 외국의 희귀한 물품을 구해 왔다. 그러나 해금정책을 펼친 결과 이것이 어려워지자, 류큐와의 조공무역을 통한 방법으로 바꾼 것이다. 류큐는 교역을 통해 손에 넣은 일본의 도검류나 동남아에서 나는 소목(蘇木), 후추 등을 명나라에 조공함으로써 값비싼 회사품(回賜品)이나 무역선을 하사 받고, 또한 명나라의 유학생을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혜택을 누렸다.

이처럼 15~16세기 당시 명나라와 류큐의 번속관계(藩屬關係, 종속관계)는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는 중화세계질서 속에서의 수평관계였으며, 그 후에 보이게 되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양속(兩屬)’적 관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류큐가 중화제국(명, 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종속하게 되는 것은, 17세기 초에 사쓰마 시마즈의 침공을 당한 이후다.

1609년 사쓰마 시마즈가 3,000명의 병사를 이끌어 아마미(奄美) 제도를 거쳐 오키나와 섬을 침공했다. 병력과 전투 경험의 압도적 차이를 배경으로, 전투는

단기간에 끝났다. 류큐 왕부(王府)는 강화협상 끝에 슈리(首里) 성을 넘겨주고 항복했다. 그 이후 류큐는 독립 왕국으로서의 모양새는 유지했으나, 시마즈의 '부용국(附庸國)'이 된 결과 정치적 통제와 상당히 무거운 경제적 착취를 당했다. 또한 일본의 중앙권력인 도쿠가와(德川) 막부는 류큐를 한 단계 낮은 '이국'으로 취급하고 그러한 격차를 내포한 국교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류큐는 그 후에도 중국과의 책봉과 조공 관계를 유지하며 중화제국체제의 조공국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류큐와의 관계를 독점하고 조공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윤을 손에 넣는 것이 시마즈의 큰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시마즈는 아마미 제도를 류큐에서 떼어내 직접 통치에 나섰지만, 류큐 왕국에 대해서는 독립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간접 지배를 이어갔다. 중국에 대해서는 류큐와 사쓰마 사이의 정치적 관계뿐만 아니라 이 양자와 일본까지 포함한 경제적 관계조차도 은폐하는 정책을 계속했으며, 훗날에는 다른 외국에 대해서도 이처럼 대응했다(波平恒男, 2014: 제1장).

2. 구미인이 본 '비무의 섬'

19세기에 들어서자 류큐 근해에 외국 선박이 빈번하게 출현했다. 1816년 영국의 알세스트(Alceste) 호와 리라(Lyra) 호가 처음으로 들어온 이후 영국, 프랑스 등의 함선이 자주 내항하여 류큐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다(McLeod, 1817; Hall, 1818). 19세기에는 이들 기록을 통해 류큐가 비무장 국가라는 사실이 서양 국가에도 널리 알려졌다. 류큐에 대한 최초의 정보 제공자인 리라 호 선장 바질 홀(Basil Hall)은,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Saint Helena) 섬에 유폐되어 있던 프랑스 전 황제 나폴레옹을 찾아가 '무기가 없는 섬'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를 놀라게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大熊良一, 1989). 홀은 영국의 중국사절단 임무 수행 중에 조선과 류큐를 방문했는데, 그때의 체험을 "우리는 류큐에서 어떤 종류이건 무기란 것을 보지 못했다. 섬 사람들도 무기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머스킷 총을 발사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 화기를 모른다는 것은 확실하다."(Hall, 1818)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찰은 그 후 류큐를 방문했던 많은 서양 사람에게 의해서도 보고

되었다. 리라 호가 류큐에 오고 나서 11년 후인 1827년, 영국의 탐험선 블로섬(Blossom) 호가 류큐를 방문했다. 선장 비치(F.W. Beechey)는 류큐 사람들에 대해 “그들은 매우 조용하고 나약해 보인다. 그들은 전쟁을 야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버려도 된다고 보일 정도다.”(大熊良一, 1979: 75) 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다. 훗날 오키나와전투의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된 ‘생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는 교훈을, 마치 그 당시부터 이 섬 사람들이 그들의 신조로 삼고 있었던 것만 같다.

다만 홀의 리라 호나 비치의 블로섬 호 등의 외국 선박이 류큐에 온 것은 류큐가 시마즈의 종속 아래 있던 시대였다. 이 시대에는 일본 내·외로의 화기류 반출이 금지되었고, 중국에 조공선을 보낼 경우에도 해적으로부터 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쓰마에 총을 빌려야 하는 등, 무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통제를 받고 있었던 것 같다. 사쓰마에 의한 무기 통제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강요된 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류큐가 ‘비무의 문화’를 가진 ‘예의바른 나라’라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였다.

오키나와 문화의 비무라는 특징은, 이 나라 ‘사(士)’의 신분에서 찾을 수 있다. 류큐의 사의 특징은 그들이 무사가 아니었다는 점에 있다. 그들은 칼을 몸에 차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존중하고 과거에 합격하여 왕부의 관리가 되기 위해 연마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았다. 이러한 점에서 류큐의 사는 일본의 무사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사대부나 조선의 양반(그중의 문반)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무사 계급은 인구의 5~6%를 차지했던 반면 류큐의 사는 인구의 4분의 1을 넘었다는 점에도 큰 차이가 있다(波平恒男, 2014: 제1장 4절).

이와 같이 무기를 소유하지 않는 류큐가 국가를 지키는 수단으로 삼은 것은 외교술이었다. 아편전쟁이 끝난 후의 1840년대에는 서양 나라들의 동아시아 진출이 본격화되고, 그러한 움직임의 물결은 발 빠르게 류큐에 도달했다. 1844년에는 영국 함선, 1846년에는 프랑스 함선이 연이어 내항하고, 류큐 왕부에 교류와 교역, 그리고 기독교 포교 허가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남겨두고 떠나버린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을 맞아들인 류큐 왕부의 관리들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 류큐가 작은 섬으로 땅은 거칠고 토산물도 적고 금은도 나오지 않는다고 응하면서 무역 개시에 대한 요구를 정중히 거절했으며, 최소한

의 필수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물러가게 했다. 류큐의 관리가 물자의 대가를 받는 것을 일체 사절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류큐의 대응은 1853년 페리 내항 때에도 관찰되었다. 다만 그들에게는 이전과는 달리 약간 고압적으로 대응했다. 같은 해 6월 페리 제독이 이끈 미국 함선은 류큐를 경유해 우라가(浦賀)에 내항했는데, 그때 그들 일행은 강제로 슈리 성에 입성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페리의 함포외교 앞에, 1854년 3월 시모다(下田)와 하코다테(函館)의 개항 등을 포함한 미일화친조약을 체결했다. 페리는 돌아가는 길에 류큐에 들러 류미수호조약(琉米修好條約)을 체결했다. 그 후 일본은 다른 서양 국가들과도 지속적으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류큐 역시 1855년에 프랑스, 그리고 1859년에는 네덜란드와 수호조약을 체결했다. 비무의 작은 나라이긴 했지만, 이처럼 류큐는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인지되고 있었다.

IV. 근대 일본에 의한 류큐병합(류큐처분)

1. 반복되는 ‘류큐처분’

1879년 류큐는 일본에 강제적으로 병합되었다. 그 사건을 가리키는 말로는 메이지 정부가 명명한 ‘류큐처분’이 정착되었다. 그러나 이 용어는 한쪽의 입장만 반영했다는 점과, 하나의 국가가 없어지고 병합되었다는 본질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 들어 필자를 비롯해 ‘류큐병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논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후의 특정 시기 이후부터 ‘류큐처분’이라는 말이 특히 오키나와 사람들에 의해 자주 쓰이곤 했다. 오키나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적 정책이나 수법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예컨대,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72년의 일본 복귀(오키나와 반환협정)는 제2, 제3의 류큐처분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지금도 일본 정부의 정책과 수법에는 같은 특징이 보인

다고 하여 이 용어는 여전히 자주 쓰이고 있다.

이처럼 ‘류큐처분’이란 용어는 권력을 비판하는 문맥에서 부정적 의미를 수반하여 사용되지만, 역사적으로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오키나와학(沖繩學)의 아버지라 불리며 ‘일류동조론(日琉同祖論)’을 제창한 것으로 알려진 이하 후유(伊波普猷)는, 그것을 ‘일종의 노예해방’이라고 평가했다(伊波普猷, 1914). 이러한 이하의 류큐처분=해방설로 대표되는 것처럼 오키나와에서는 전전(戰前)기 뿐만 아니라 전후의 미국 통치 시대, 그리고 그 지배하에서의 복귀운동 시대까지만 해도 그러한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컸다. 즉, 메이지 정부가 ‘류큐처분’을 실시한 고압적이고 강권적인 방법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민족통일’을 실현했다, 혹은 그러한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역사적으로 보아도 진보적이었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던 것이다(波平恒男, 2014: 5절).

그런데 1972년 일본 복귀의 내실이, 오키나와 주민에 의한 복귀운동이 지향했던 ‘기지가 없는 평화로운 오키나와’라는 목표를 크게 배반했었다는 점, 그리고 현재까지도 미·일 동맹 관계의 모순이 오키나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키나와가 여전히 국가 정책과 국익의 희생양이 되고, 그러한 관계의 원점으로서의 ‘류큐처분’이 다시 각인되었다. 즉,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차별 정책과 강권적 수법으로 오키나와를 마치 ‘물건 취급’할 때마다 ‘새로운 류큐처분’이나 ‘현대의 류큐처분’과 같은 비판과 항의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다.

2. 류큐병합의 역사적 과정

1879년의 류큐병합(류큐처분)과 그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졸저 『근대 동아시아사 속의 류큐병합』을 참고하기 바람여 여기서는 꼭 짚어야 할 중요한 점만을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

메이지 정부에서는 1872년 5월 무렵부터 류큐의 위상이 문제화되었으며, 오쿠라다유(大藏大輔)를 맡았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나 외무경(外務卿, 외무대신)이던 소에지마 타네오미(副島種臣)에 의한 건의, 그리고 정원(正院)의 자문에 대한 좌원(左院)의 답 등이 이루어졌다. 그중 메이지 정부가 채택한 것은 소에지마의

제안으로, ① 쇼타이(尚泰)를 번왕(藩王)으로 책봉하고, ② 일본의 화족(華族)으로 대우하며, ③ 류큐와 외국과의 '사교(私交)'를 중지하는 것이었다.

류큐 왕부는 '왕정어일신(王政御一新, 메이지유신)'을 축하하는 사절로 이에(伊江) 왕자 일행을 도쿄에 파견했다. 1872년 9월 14일 이에 왕자 일행은 황궁에 입궐해 메이지 천황을 알현했다. 그때 류큐 국왕인 쇼타이에 대해 "지위를 올려 류큐 번왕으로, 그리고 일본의 화족으로 봉한다"는 '책봉의 조칙'이 선포되고 사절에게 조서를 하사했다.

이 사건은 '류큐번 설치'라고 불려왔으나 정확하게는 '류큐 번왕'의 '책봉'이라 해야 할 것이다. 양쪽 당사자 모두가 '번의 설치'가 아니라 '책봉'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다만 메이지 정부가 그 후에 류큐를 류큐 번이라 부르고, 1879년 3월 '폐번치현(廢藩置縣)'의 '처분'이 실시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류큐에서는 '판적봉환(版籍奉還)'이 없었던 것은 물론, 종전의 왕국 통치기구가 1872년 이후에도 여전히 존속되고 있었다. 이처럼 왕부기구가 해체되고, 하나의 왕국이 폐지되어 일본 제국의 일부(오키나와 현)가 되고 말았다는 점이 '류큐병합'의 본질이었다. 그러나 후대의 역사학은 그것을 (류큐 번 설치를 전제로) '폐번치현'의 특수 사례이며, 나아가 '민족 통일'의 일환이었다고 하여 근대주의적으로 해석해왔다(安良城盛昭, 1980).

류큐는 조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세기의 도쿠가와 정권(막부)과는 사절이 정기적으로 오가는 '통신국'으로서의 국교관계가 있었지만, 천황(조정)과는 전혀 왕래가 없었다. 그러나 '왕정복고(王政復古)'와 그 후 많은 개혁으로 인해 막부뿐만 아니라 류큐 왕권의 충성의 대상이었던 시마즈의 가고시마(사쓰마) 번도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류큐(왕권)와의 관계 설정(재편)을 위해, '류큐 번왕'의 '책봉'을 행하고, 천황과 쇼타이 왕과의 군신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류큐가 황국 일본에 '번속'하게 되었다고 간주했다(波平恒男, 2014: 제2장).

메이지 정부와 류큐의 관계는 그 후 약 2년간은 비교적 온건했다. 외무경인 소에지마는 류큐에 '국체정체(國體政體)'의 영구적 유지와 "청과의 국교 또한 지금까지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류큐에서 청나라로 보내는 조공사 파견도 계속되었다. 다만 류큐의 '사교', 즉 구미 각국과의 외교관계는 중단할 것을 명하고, 류큐가 맺은 모든 조약의 원본도 외무성에 압수되었다.

한편, 그 2년 동안 일본에서는 정한론 정변(메이지 6년 정변)과 타이완 출병이 일어났다. 메이지 초기에는 조선도 황국 일본에 ‘번속’시켜야 한다는 사조가 있었으며, 그것이 정한론으로 부상했다. 류큐 번왕 책봉과 같은 시기, 구(舊) 쓰시마 세력과 조선과의 ‘사교’를 폐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의한 부산 왜관 접수가 강행되어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 내에서 ‘정한’ 문제가 대두되어, 1873년 10월 정변극으로 발전했다. 그 때문에 생겨난 불평사족(不平士族) 대책의 필요성으로 실시된 것이 1874년 5월의 타이완 출병이었다. 출병의 주된 이유로 거론된 것은 1871년 말에 일어난 타이완에서의 류큐인 조난자 살해사건이었다. 타이완 출병 후 정부는 류큐와 청국과의 전통적 관계를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波平恒男, 2014: 3장).

정변 후 오키노 도시미치(大久保利通)가 주도한 정권은, 1875년 벽두에 ‘류큐 번 처분’에 나섰다. 내무경(內務卿)인 오키노는 류큐로부터 사자를 불러 설유(說諭)한 다음, 같은 해 7월 내무대승(內務大丞)을 맡았던 부하 마쓰다 미치유키(松田道之)를 직접 류큐에 보냈다. 마쓰다의 임무는 중국과의 조공이나 책봉과 같은 전통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비롯해, 군부대의 설치, 류큐 왕부(번)의 직제(職制) 개혁, 메이지 연호 사용 등 여러 항목의 정부 명령(조명, 朝命)을 류큐에 전달하고, 준수할 것을 확약 받는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일본과 류큐 양측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류큐와 청나라의 전통적 관계였다. 마쓰다가 류큐의 ‘양속’을 인정하는 것은 일본의 ‘국권’을 해치는 일이라며 청나라와의 관계 단절을 요구한 데 대해, 류큐 왕부에서도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사안에서는 타협을 하더라도 중요하게 여기는 청나라와의 관계 단절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겠다는 방침으로 임했다. “왜냐하면 진공은 우리나라의 예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제도로 중시되어 왔다. ... 만일 한 번이라도 청나라와의 밀접한 관계를 끊게 된다면 저절로 자유권을 잃게 되어 제약 받고 구속 받아 국가는 영구유지 불가능하게 될 터다.”(喜舎場朝賢, 1977: 21)라고 하면서, 그것은 류큐가 곧 국가로서의 존립에 직결하는 사안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마쓰다는 류큐가 심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행스럽게도 번에 병력이 없고, 사람들은 유약하고 순박하여 그들만으로 우리에게 대항할 능력은 없을 것”(下村富士男, 1962: 125)이라 하고, 조명을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한

후 일단 귀경했다.

류큐는 그 후에 이케구스쿠(池城) 웨카타(親方)³ 일행을 사신으로 보내 태종대 신(太政大臣)인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에게 조정의 명령을 거두어 줄 것을 탄원하고, 나중에는 도쿄에 주재하는 외국의 공사들에게도 힘을 보태도록 요청했다. 또한 1876년 12월에는 고치(幸地) 웨카타(중국식 이름으로는 向德宏) 일행을 몰래 청나라에 파견했다. 이들의 탄원은 청나라 조정에 전달되어 가 조슈(何如璋)가 초대 공사로 도쿄에 취임한 후 일본의 조공 방해 조치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지만, 메이지 정부는 교섭에 의한 해결을 계속 거절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879년 3월 '폐번치현'의 '처분'이 내려졌다. 천황과 쇼타이 왕의 군신관계를 전제로 한 이 처분은, 류큐 왕부(번)가 청나라와의 관계 정지나 류큐 내에서의 재판권 인도에 대한 명령을 계속해서 거절했다는 조리(이류)로 이루어졌다. 현지에서의 무력 행사를 포함한 최고 지휘권을 부여받은 '처분관'인 마쓰다 미치유키에게는 도쿄에서의 경찰관 160명, 그리고 도중 기항지인 가고시마에서는 구마모토 진대(鎮臺)의 병사 400명이 수행하고, 그야말로 무력에 의한 위협을 배경으로 슈리 성은 빼앗기고 쇼타이 왕은 도쿄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波平恒男, 2014: 제4장). 실제로 빼앗긴 슈리 성은 구마모토 진대 분견대의 병영이 되고, 이 분견대는 청일전쟁이 끝난 후 1896년까지 주둔했다.

3. 메이지 정부의 정책과 류큐 · 오키나와의 저항

위와 같이 류큐병합(류큐처분)의 개요를 대략적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두세 가지 지적해 두고 싶다. 첫째, 1875년 메이지 정부가 류큐의 주민(번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구마모토 진대의 산하 병영 설치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류큐 측의 회답은

류큐는 남해의 벽지에 있는 둘레 백여 리의 작은 섬으로 지금까지 거의 병사를 배치하지 않고 예의를 통치의 기본으로 하여 통치를 해왔으며 외국선이 내항했을 때

³ '웨카타'는 류큐 사족의 가장 높은 지위다.

에도 대화로 응대하며 지금까지 무사히 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병영을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외국에서도 강하게 압박해 올 것이며 오히려 곤란을 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병영 설립의 뜻은 정상을 참작해 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下村富士男 編, 1962: 86).

라는 것으로, 그 당시까지 ‘무기나 병력을 소유하지 않고 예의를 갖춰’ 외국과 교류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유지해 왔다는 류큐의 국시인 ‘비무의 안전보장’ 이념을 강조해 메이지 정부의 요구를 강하게 거절했던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청나라와의 관계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 류큐는 이 안전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그다음 해 20여 명으로 구성된 분견대가 배치되었다.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오키나와에 대한 군사력 배치의 효시가 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진대 산하 병영 설치에 대해 류큐 주민의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본심은 류큐의 반항에 대해 위협과 진압으로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1872년에는 이미 류큐의 처우가 정부 내에서 문제가 되었으며, 당시 좌원의 건책(建策, 답의)에서는 “류큐는 과거 시마즈에서 사관을 파견해 왕조를 다스렸다. 그러한 사례에 따라 앞으로는 규슈의 진대에서 병력을 보내야 한다. … 병력은 외구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류큐 국내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많은 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下村富士男, 1962: 9)이라 했지만, 그러한 생각은 정부 내에서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둘째, 류큐병합의 다음해인 1880년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발생한 ‘분도개약(分島改約)’ 문제다. 일본 정부는 청나라에 대해, 청일수호조약(淸日修好條約)을 통해 청나라 내지(內地)에서의 일본에 의한 통상권을 인정하는 최혜국대우를 요구하는 대신, 류큐 제도 중 미야코(宮古)와 야에야마(八重山)를 청나라의 관할로 하는 것(청나라는 이 땅에서 류큐를 부활시킬 생각이었다)을 인정하는 ‘분도개약’을 제안했다. 이 안은 1880년 8월부터 두 달에 걸친 양국 간의 교섭으로 일단은 타결되었으나, 그 후 청나라가 조인을 연기하는 바람에 결국 실현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波平恒男, 2014: 제5장).

폐번치현의 ‘처분’이라는 메이지 정부의 용어법(用語法)에서 유래하는 바와 같이, ‘류큐처분’은 1879년에 끝을 맺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긴쥬 세이토쿠(金城正篤)가 다른 견해를 피력하면서, '류큐처분' 1880년에 발생한 분도문제의 종식까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 의한 '분도개약' 제안에는, 자국의 국익(중국에서의 내지 통상권 획득)을 위해서는 류큐 제도 주민의 의향을 무시하고 류큐 분할, 즉 '민족의 분단'을 개의치 않는다는 종전의 '처분'과 같은 '정책기조'가 보이기 때문이었다(金城正篤, 1978).

셋째, 류큐와 오кина와의 사족(土族)⁴에 의한 구국운동의 평가 문제다. 1876년의 고치 웨카타나 1881년의 도미가와(富川) 웨카타 일행을 비롯해, 일본병합 후에도 오кина와에서는 많은 사람이 청나라로 건너가 류큐의 구국, 복국(復國) 청원운동을 전개했다. 오кина와의 자치에 대한 요구는 메이지 전반기에 들어 북국·독립회복 운동이라는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청나라로 탈출해 구국·복국 운동을 벌인 사람들은, 당시의 경찰용어를 사용해서 '탈청인(脫淸人)'이라 불려 완미고루(頑迷固陋)한 사람으로 여겨져 왔는데, 그들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비교적 최근 일이다. 특히 니시자토 기코(西里喜行)는 이 사람들을 '망명류큐인(亡命琉球人)'이라 바꿔 불렀다. 그들은 류큐분도(琉球分島, 류큐의 분할)에 반대하면서, 청나라 정부에 모든 섬이 포함된 통일적인 회복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류큐 분할을 저지하는 데 기여한 역할의 해명과 함께, 그들의 '구국청원서'의 체계적인 수집과 일본어로의 번역 작업을 해 나갔다(西里喜行, 1992; 2005).

V. 동화·황민화에서 오кина와전투로

1. 오кина와인의 '식객'적 경우

류큐병합의 결과 왕부 구조는 해체되고 메이지 정부에 의한 오кина와 통치가 시작됨과 동시에, 현령(縣令, 현지사)을 비롯한 현청 관리 등의 정치적 지배층은 다른 지역 출신자(내지인=아마토인)로 바뀌었다. 반면 정부와 현 당국은 현정(縣政)

⁴ 역주: 메이지유신 후 족칭의 하나로, 화족의 밑, 평민의 위인 무사·선비 계급에 해당한다.

의 방침으로 종래의 ‘구관제제도(舊慣諸制度)’를 존속시키는 정책을 채용했다. 일본식 교육의 도입을 제외하면 본토에서 실시된 개혁 중 대부분을 오키나와에서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구관온존정책(舊慣溫存政策)’은 청일전쟁을 거쳐 메이지 30년 무렵까지 이어졌다.

일본 본토(내지)에서는 관리와 경찰관뿐만 아니라, 교사나 다양한 상인들까지 들어왔다. 그리고 경찰이나 교육계 등의 요직은 물론이고 경제계의 실권도 오키나와 현의 보호 아래 본토 출신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내지에서 들어와 체류하게 된 상인은, 오키나와 현이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무렵에는 2,000명 가까이 되었고, 유통이나 금융 등의 실권을 장악하여 오키나와 경제를 일본시장으로 편입시켰다. 내지에서 온 한 여행자가 당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땅에서 내지인이 잘난 체하는 꼴은 마치 구미인이 일본에 와서 잘난 체하는 것과 같다. 유리한 일은 모두 내지인의 손에 들어가고 이익이 나지 않는 직무는 항상 토착민에게 돌아간다. 내지인은 영주이고 토착민은 하인이다. 내지인은 거만하고 토착민은 겸손하다. 요지가 되는 큰 길가는 내지인의 상점이고 변두리 좁은 길에는 토착민들이 산다. 이것은 생존경쟁의 결과라 어쩔 수가 없는 것이라 해도 망국의 국민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琉球政府 編, 1965: 487).

이렇게 류큐가 나라를 잃은 후, 오키나와 현에 식민지적 상황이 도래했다. 마치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처럼, 오키나와 사람들 스스로가 이 시기의 상황을 묘사한 기록은 많지 않다. 근대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언론인인 오타 초후(太田朝敷)는, 현정 초기의 체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세대에 속하는데, 오키나와의 내부로부터 일본(내지)으로의 동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 그마저도 나중에 이 시기를 회고하면서 오키나와인이 ‘식객(食客)’ 입장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폐번치현의 처분으로 정치상의 권력이 현민의 손에서 완전히 떠난 것은 따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그렇다면 사회적 세력은 어떤가 하니 지금과는 달리 관현의 압력이 어디든지 미치는 시대였기 때문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인데도 마치 식객의 입장에 놓인 것과 같았다.”(太田朝敷,

1993: 41)

오타는 현청 관리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각계의 실권이 외래자에게 장악당한 상황을 ‘사회적 세력’을 잃은 ‘식객’의 경우라 하고 “이러한 곳은 아마도 식민지 외에는 없을 것이다.”(太田朝敷, 1993: 149) 라고 말하고 있다. 오타에 의한 이와 같은 비유는, 오키나와인이 자신의 향토에 있으면서도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식민지’적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오타는 청일전쟁 후에 ‘공동회(公同會)’ 운동을 주창하고 좌절하게 되었다. 그의 그러한 시도와, 오키나와 최초의 신문인 『류큐신보』(1893년 발간)에서 그가 펼친 ‘적극적 동화’론의 배경에는, 위와 같은 치현 후 오키나와의 식민지적 상황과, 오키나와인의 ‘사회적 세력’ 회복을 통한 식민지적 상황에서의 탈출에 대한 바람이 있었던 것이다.

정부와 현당국은 ‘구관’을 존치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채택하는 한편, 교육을 통한 젊은이들의 동화에는 힘을 쏟았다. 청일전쟁기까지는 취학률이 지지부진한 신장률을 보였지만, 신세대의 일본 동화라는 측면에서는 교육이 직접적으로 매우 큰 역할을 했다. 그리하여 오키나와 현의 교육정책과 그것을 떠맡게 된 학교의 교원 외에도, 병합 후에 내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루는 ‘사회적 세력’에 의해 오키나와인의 일본으로의 동화와 황민화가 시작되었다. 앞서 소개한 여행 기사에서는 내지인과 오키나와 사람과의 상황 차이가 ‘우승열패의 결과’라고 단정되었으나, 오키나와의 동화·황민화의 밑바탕에는 내지인의 그러한 우월감, 그리고 문명의 개화 정도를 포함한 우열 의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식은 머지않아 오키나와 사람들에게도 내면화되어 갔는데, 특히 청일전쟁 이후에는 오키나와 내무로부터의 적극적인 동화지향을 낳기도 했다.

2. 청일전쟁 후의 여러 개혁

1894~1895년에 걸쳐 발생한 청일전쟁의 결과는 오키나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개전이 알려지자 그때까지 은밀하게 세력을 유지해 온 친청파(親淸派)의 ‘완고당(頑固黨)’과, 일본 통치에 귀순한 ‘개화당(開化黨)’이 격렬하게 대립한 결과, 오키나와 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1895년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이완의 영유권을 획득하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현안으로 남아 있

던 오키나와 ‘귀속’ 문제도 저절로 결말을 맺게 되었다. 일본의 국경이 타이완까지 확대된 결과 오키나와의 군사적 가치는 저하되고, 슈리 성에 주둔하고 있었던 분견대도 다음해인 1896년에는 철수했다. 청나라 지원으로 복국을 기대했던 완고당은 급속하게 영향력을 잃고, 구세대 사람들도 일본에 병합된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청일전쟁이 종결된 이듬해에 결성된 ‘공동회’ 운동은, 개화파가 주도하고 완고파도 대동단결하여, 정부에 오키나와의 특별자치제도 실현을 촉구하는 정치운동이었다. 7만 3,000명의 서명을 모은 공동회 운동이었으나, 정부로부터는 시대착오적인 ‘복번운동’이라고 일축되고 허무하게 무산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회적 세력’까지 상실한 오키나와 사람들의 ‘식객’적 경우와 청일전쟁 후의 새로운 상황에서, 당시의 오키나와 사람들이 대동단결하여 자치회복을 목표로 활동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 정부의 오키나와 정책도 종래의 구관존속정책에서 ‘내지’와의 제도적 일체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다만 지방제도와 자치제도의 전환은 서서히 이루어졌고, 국정선거(國政選舉)의 전면적 실시는 더욱 늦어졌다. 이처럼 정치와 자치행정 면에서의 ‘제도적 차별’ 해소는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1899년부터 4년에 걸쳐 실시된 ‘토지정리’는 구관의 가장 중요한 기둥을 이룬 ‘토지제도’를 발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토지분할제도(地割制度)는 완전히 폐지되고, 농민의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이에 수반하여 조세제도도 개정되었는데, 물납이 폐지되고 금납조세로 개정되었다. 일본 본토의 ‘지조개정(地租改正)’에 상당하는 이 개혁으로, 근대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의 준비가, 4반세기나 늦어진 가운데 드디어 실현되었다.

3.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동화

1898년 오키나와 현에서의 징병제도 시행은 오키나와 사람의 동화와 황민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류큐신보』나 교육 관계자 등은 ‘다른 지역(他府

県)과 동등한 지위 획득으로 이어진다고 해 징병령의 시행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계몽에 나섰다. 이 시행을 계기로 징병 해당자를 위한 '장정교육(壯丁教育)'이 학교 관계자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으로 시도되었다. 그러한 배경에는 병사로 입대한 오키나와 출신자가 표준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군대 내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사정이 있었다. 군대 내부에서 차별이라는 체험은, 돈벌이를 위해 찾아간 본토에서의 일터나 해외 이민지에서의 차별 경험과 함께, 오키나와 사람들이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으로의 동화를 지향하게 된 계기로 강력하게 작용했다.

병합 후의 오키나와에서 '동화·황민화'가 문제가 된 이유는, '언어 불통'으로 상징되는 일본(본토)과의 커다란 문화적 차이와 황국 일본에 대한 귀속의식이나 충성심이 원래 없었기 때문이었다(波平恒男, 2011). 이러한 점에서 교육과 더불어 징병제나 군대에서의 체험은 오키나와 사람들의 동화와 황민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신적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징병제 시행 이후, 오키나와 사람들이 병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자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징병 적령기를 앞둔 젊은이들 중에는 이민으로 해외에 도피하거나, 자해 등으로 징병 기피를 시도하는 자가 끊이지 않았다. 1910년의 '모토부사건(本部事件)'처럼 징병검사관의 강압적인 태도에 민중이 분노하여 검사장으로 밀어닥쳐 크게 소란을 피운 사건도 발생했다(新川明, 1973; 大田昌秀, 2014).

일본 본토에서도 징병 기피는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볼 수 있었는데, 오키나와에서는 시행 시기가 지연되면서 그 특수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오키나와의 민중 생활에 깃들여 있는 '비무의 문화'와의 마찰 역시 징병 기피의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오키나와의 동화·황민화 과정은 언어와 풍속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비무'의 문화와 심성이 억압되어 온 과정이기도 했다. 징병 기피는 그러한 저항의 관점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어찌되었건 일본 제국이 부국강병의 길로 매진하는 가운데 위정자나 군인은, 많은 오키나와 사람들이 징병을 기피한다는 점과 진충보국(盡忠報國) 관념이 희박하다는 점, 그리고 무예를 숭상하는 기질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열등한 현민성을 비판했다(沖繩沖繩県教育庁文化財課史料編集班, 2012).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요인들이 동화를 서두르는 지도자층의 초조함을 야기했으며, 오키나

와 내부로부터의 동화·황민화를 더욱 재촉하게 되었다.

오키나와전투는 이러한 ‘차별’을 내포한 동화·황민화의 비극적 결말이며, 오키나와 근대사의 불행한 총결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이었다. 그 특징에 대해서는 본토 방위를 위한 시간 벌기의 ‘사석(捨石, 희생양)’ 작전이었다는 점, 오키나와에서 모든 것을 조달해야 한다는 총동원체제였다는 점, 장기간에 걸친 ‘군민 혼재의 지상전’ 양상을 띠었기 때문에 군인보다 오키나와 주민 차원에서 희생자가 많았다는 점, 민간인 희생자 중에는 일본군에 의해 스파이 혐의나 방공호에서의 추방 등의 이유로 살해되거나 죽음을 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大城將保, 1988).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는 여러 우연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 오키나와 사람들에 대해 강압적인 차별을 내포한 동화·황민화가 가해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막대한 주민의 희생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大城將保, 1988).

VI. 전후의 일본과 오키나와

1. 미군 통치에 대한 저항과 비무의 전통으로의 회귀

히가시이나 간준(東恩納寬惇)은 이하 후유와 비견할 만한 오키나와학의 권위자지만, 황국사상과 무사도문화를 깊이 내면화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패전 후인 1950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생각건대, 이번 패전으로 일본은 3,000년의 역사를 유감없이 버리고 무사도(武士道) 일본의 전통마저도 헌신짝처럼 벗어 던지고 오로지 평화국가, 문화국가의 출현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오키나와가 300년 전의 (시마즈의 침공) 패전 이후 계속해서 지켜 온 이념이었다. 아아, 이 작은 해양국가, 항상 평화에 연연하여 모든 군비를 버리고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천지의 만물에 참여하고 지상의 낙원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격랑은 끊임없이 생활을 위협하고 착취하여 마침내 소멸시키기에 이르렀다. 젊은 인류의 문명에 그러한 과거의 과실을 회고하고 반성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야말로 이들 섬 생활이, 이념이, 문화가

깊은 동정과 애착을 가지고 추념되어야 할 것이다(東恩納寬惇, 1978: 193).

이와 같이 히가시온나는, '평화국가', '문화국가'라는 이상을 내걸고 출발한 전후 일본의 모습에, 과거 류큐 왕국의 '비무'의 이념을 중첩시켜 상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이 지내온 전후 70년을 되돌아보면, 오키나와가 그 후의 미군 통치에서 '군대가 없는 평화로운 오키나와'를 계속 추구해 온 반면, 일본은 '재군비'와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점차적으로 강화하는 길을 지향했다. 이에 더하여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체제의 모순을, 마치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의 하나였던 지역에 전가하고 있는 대조적인 길을 걸어 온 것처럼 보인다.

패전의 결과, 일본의 전후 시대는 점령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한 상황은 오키나와도 일본(본토)과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점령과 전후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참한 지상전이었던 '오키나와전투' 이후의 일, 즉 '오키나와전투'를 거친 다음에 이루어진 점령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 본토의 점령이 '항복 후의 점령'으로, 패전 후 한 달도 안 되어 점령군이 평화로이 '진주'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던 반면, 전후에 오키나와에서 이루어진 점령은 오키나와전투와 동시에 진행된 '교전 중의 점령'으로 시작되었다. 1945년 3월 말 게라마(慶良間) 열도를 제압한 미군은, 4월 1일 오키나와 본도 중부 서해안에 상륙하여 일본군과 주민을 남북으로 몰아넣는 지상토벌전을 벌였다. 이러한 전투 상황 속에서도 점령한 전선 배후 지역에는 계속해서 수용소를 짓고, 그곳에 보호를 요청하거나 투항한 주민과 군인을 수용했다.

오키나와전투가 끝난 후, 오키나와 본도의 모든 주민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각지의 수용소에 갇혔으며 자유이동도 금지되었다. 수용소 밖은 모두 미군의 관리하에 놓여, 이른바 섬 전체가 미군의 군용지가 되었다. 미군은 오키나와전투가 한창이던 때부터 무인 지역이 되어버린 땅에 일본 본토 공격에 대비해 거대한 기지를 건설했다.⁵ 그리고 전후에도 필요한 토지는 그대로 확보한 채 쓸도

⁵ 현재 반환(이설)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는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도 이런 형태로(오키나와 전투 중에) 건설된 기지 중 하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미군 재편에 대한 미·일 합의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가 후텐마 기지를 나고(名護) 시 헤노코(辺野古)로 이설할 계획을 추진해 왔었지만, 오키나와 측은 후텐마 기지가 주민의 합의 없이 토지를 수용해서 건설한 역사적 경위도

없어진 땅만을 거주지와 농지로 주민에게 개방했다. 이러한 맥락으로 오늘날까지 오키나와에서 현안으로 남아 있는 ‘기지 문제’가 되었다

다음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미군이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를 점령하는데 있어서의 차이점이다. 즉, 점령의 형태와 목적의 차이이다. 일본 본토에 대한 점령은 연합군(실제로는 미군이 주도했다)에 의한 간다저구 점령으로, 그 목적은 비군사화와 민주화에 있었다. GHQ(연합군총사령부) 산하에서 일본 정부의 통치기구는 존속되었고, 양자의 협동 아래 민주화를 위한 여러 개혁이 실시되었다.

이에 비해 오키나와전투는 미군 단독으로 수행되었고, 종전 후에도 미군에 의한 점령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즉, 오키나와에서의 전후 점령은 미군에 의한 직접적 점령의 형태를 보였다. 현청을 비롯한 통치 기구는 전전(戰前)에 이미 물적·조직적으로도 완전히 와해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점령 통치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수용소 안에 새로운 주민 측 조직이 설치되었으며, 제한된 형태였으나 이것이 전후 오키나와에서 ‘자치’의 효시가 되었다. 미군은 비군사화와 민주화가 아닌, 어디까지나 군사 목적을 위해(對日) 감시가 목적이었지만 곧바로 동아시아 냉전이 시작되면서 전진기지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게 되었다. 오키나와를 점령했고, 일본 본토로부터 분리시켜 군정을 이어간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전쟁과 점령은, ‘오키나와의 전후’를 장기적이고 대규모적으로 규정지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주권을 회복하여 국제사회로 복귀했다. 그러나 일본 점령에 종지부를 찍은 이 조약(제3조)에 의해, 오키나와는 계속해서 미국=미군의 통치에 놓이게 되었다. 1952년 이후 20년 사이에 오키나와 통치의 법적 근거는 바뀌기도 했으나 군정, 즉 실질적인 점령 상태가 지속됐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처럼 미군에 의한 오키나와 통치는, 대일강화조약 체결에 따라 종료했다. 그러나 조약 체결 후, 즉 독립 후에도 (미·일 안보를 이유로) 미군 주둔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곳곳에서 격렬한 반기지 투쟁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1950년대 후

지적하면서, 기지의 신속한 반환(폐쇄)과 현내 이설(헤노코의 대체기지 건설) 반대를 강하게 주장해 일본 정부와 침예한 대립을 빚어 왔다. 헤노코 신기지 건설은, 이 글을 집필 중인 현재 예측을 불허하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반부터 1960년대 초반에 걸쳐 일본 본토에서는 미군기지의 폐쇄나 축소가 진행됐지만, 일본 본토에서 철수한 부대의 대부분이 오키나와로 이전하면서⁶ 새로운 군용지를 강제로 접수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일본의 기지 문제는 오키나와에 물리게 되었다.⁷ 이러한 점에서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는 오키나와의 분리 통치와 군사 요새화를 조건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키나와의 전후사(일본 복귀 전의 시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상세히 논할 지면의 여유가 없다.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다음 세 가지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키나와전투와 바로 이어지는 형태로 미군에 의한 직접적 점령과 기지 건설이 이루어졌고, 그 후에도 미군을 우선으로 한 미국 통치 아래 주민들은 다양한 형태로 인권을 유린당하고 구속당했다는 점, 그러나 그에 굴하지 않고 비폭력적인 저항 운동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해 항의 의사를 표명해왔다는 점이다(新崎盛暉, 2001). 둘째, 미군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민에 의한 일본복귀운동이 고양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 민주주의적 색채가 강했던 단계에서 '자치권 확대'를 위한 투쟁을 거쳐, 1960년대 후반에 일어난 '반전복귀' 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후 오키나와 대중운동의 역사에서는, '비무'의 전통으로의 회귀(재선택)라는 형태를 띤 '반전평화' 사상과 심성을 일관되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与那国暹, 2005).

이처럼 '일본 복귀'가 이루어진 1972년 전후에는, 이 절 모두에서 서술한 것과 같은 '평화'와 '자치'(그리고 '인권')를, 오키나와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이루는 핵심으로 보는 견해가 정착되어 있었다. 복귀를 코앞에 둔 1971년 경제학자 구바 마사히코(久場政彦)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희구해온 일본 복귀란 ... 복귀를 기회로 군사기지에서부터 해방된 오키나와에 새로운 체제를 확립해서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키나

⁶ 후텐마 비행장 소속의 미군 해병대도 1950년대 후반에 일본 본토(기후 현·야마나시 현)에서 오키나와로 이주했다. 이로 인해 미 육군기지였던 이 비행장도 해병대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⁷ 1972년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 시점에는 본토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비율이 거의 같았지만, 그 후 일본 본토의 미군기지가 대폭 축소된 것에 반해 오키나와는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이 재일 미군기지 4분의 3이 오키나와에 집중되었다.

와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전시 중, 그리고 전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섬을 감싸고 있는 군사적 분위기에 더 이상 길들여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 오키나와는 군사기지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결백하다. 강대한 군사기지가 오키나와에는 존재한다. 하지만 그 존재에 대해 오키나와 사람들이 스스로 긍정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久場政彦, 1971: 138-139).

그러나 복귀 후에는 오키나와가 국회에서의 ‘수(數)의 민주주의’에 매몰되어 ‘결백’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복귀에 따른 이와 같은 추이를 진심으로 두려워한다.”라고 했고, “어느 날 유사시 다시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오키나와가 전장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본토의 한계지역 ... 으로 처분되는 고통을 또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오타 마사히데(大田昌秀)는 오키나와전투 연구를 중심으로 오키나와 근현대사에 관한 많은 저서를 썼고, 오키나와 현지사를 1990년부터 두 번이나 지낸 인물이다. 그는 1972년 『오키나와의 마음(沖繩のこころ)』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키나와의 마음’은 ‘반전 평화’, ‘인권 회복’, ‘자치 확립’이라는 사고가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 번 지적해 왔다. ... 전전, 전후의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대중운동의 자취를 세심하게 확인한 후에 내린 결론이다. 또한 오키나와의 마음이 이렇게 형성하게 된 계기는, 오키나와전투의 체험과 함께 전후 27년 동안이나 이민족의 군정하에 있었던 생활 경험에 기인한다(大田昌秀, 1972: 6).

이처럼 일반적으로 오키나와 사람의 아이덴티티 핵심에는 ‘평화’와 함께 ‘자치’(와 인권)에 대한 희구가 있다고들 한다. 이 요소들이 한 세트처럼 다뤄지는 이유는, 오키나와의 ‘평화’ 지향이 ‘비무’의 전통문화에 뿌리내려 오키나와전투의 체험과 전후의 미군정에서 인권투쟁을 하는 동안에 굳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형태로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자치’(자기결정)권을 오랫동안 빼앗겨왔기 때문이다.

2. 아시아의 평화로운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그러므로 오키나와에서는 전후 독립론을 포함한 다양한 ‘자치·자립’ 구상이 발표되고 자기결정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宮里政玄外, 2009; 仲地博, 2010; 大田昌秀 外, 2013). 소개를 하자면 이 절의 과제를 벗어나게 되는데, 이들 대부분에 공통된 특징으로는 오키나와의 탈군사기치화와 연동한 형태로, 아울러 아시아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성을 살려 오키나와를 다시 평화로운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형성해 나가자는 미래 구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상을 현정 차원에서 구체화시키려고 한 것이 오타 도지사 시대의 ‘기지 반환 액션·프로그램’을 수반한 ‘국제도시형성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 구상은 구체적인 정책이 실시되기 전에 후텐마 기지의 현내 이설에 대한 일본 정부와의 대립과, 오타 현지사가 선거 패배로 퇴진하게 되면서 좌절되었고, 결국 차기 현정에선 포기했다(佐道明広, 2014). 참고로, 오타는 퇴임 후 “군사적으로 불행한 역사를 짊어진 오키나와에 어떤 새로운 미래를 일굴 수 있겠는가라는 발상에서, 오키나와는 지금 다시 한 번 쇼신 왕 시대의 평화를 국시로 한 그 정신을 되새기고 이웃 나라들과의 우호관계를 심화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국제도시 형성 구상은 그러한 발상과 이념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다.”(大田昌秀, 2000) 라고 서술했다.

이 같은 발상과 이념은 오키나와 현이 처음 책정한 장기 구상인 ‘오키나와 21세기 비전’(2012년 3월)에도 명백히 맥을 잇고 있다. 2030년을 내다본 이 장기 구상의 5가지 주요 내용에는 ‘오키나와다운 자연과 역사, 전통, 문화를 소중히 하는 섬’, ‘넉넉한 마음으로 안전·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섬’, ‘세계를 향해 열린 교류와 공생의 섬’ 등이 있고, 이러한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의 ‘고유 과제’로 ‘대규모 기지 반환과 현토(県土)의 재편’을 들고 있다.⁸

복귀 후에도 오키나와의 기지에 대한 부담은 여전했지만, 오키나와 경제에서

⁸ http://www.pref.okinawa.jp/21vision/archives2/okinawa21_201004.pdf(최종 검색일: 2015. 8. 31).

기지의 효과가 차지하는 무게는 크게 저하되었고 관광업이 주된 산업으로 성장해왔다. 관광은 평화적 산업으로 군사기지와는 양립할 수 없다. 가령 동아시아에 국제분쟁이 발생하면 오키나와가 가장 먼저 공격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뜬소문만으로도 관광업을 주요 산업으로 삼고 있는 오키나와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이러한 점에서 군사기지의 집중이 오키나와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현민들 사이에서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

전후 오키나와에서는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인간의 안전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비폭력적 저항을 특징으로 한 반기지 운동을 이어왔다(星野英一, 2013). 그리고 그러한 운동은 오키나와를 군사요새에서 비무장완충지대로, 나아가 평화로운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일본 전체를 위해, 아울러 동아시아나 넓게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크게 공헌하는 것이라는 인식과 주장이 항상 함께 해왔다(平恒次, 1970; 久場政彦, 1971). 역사적으로 오키나와 사람들이 굳게 지켜온 ‘비무의 평화’에 대한 신념은 앞으로도 강화될지언정 달라질 일은 없을 것이다.

VII. 맺으며

오키나와는 자연풍토,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 등으로 일본 안에서조차 매우 독자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자신들(오키나와에 뿌리를 가진 사람들)을 우치난추라 부르며 지역에 뿌리 내린 일체감과 동포의식이 강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우치난추로서의 집합적 자기의식은 에스니시티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일종의 민족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기원을 더듬는 일은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키나와의 근대사를 관통하는 특징이며 전후에도 재생산되어 왔다는 것은 확실하다. 즉, ‘류큐처분’을 통해 메이지 국가로 편입된 이후의 시기에 이루어진 일본으로의 ‘동화’와, 그 힘든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강요된 ‘차별’과 ‘배제’의 체험들이 섞여 형성된 것이다. 그것이 오키나와전투의 체험, 전후의 미군 통치와 복귀 운동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시점까지 재생산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핵심에 오키나와의 역사체험에 뿌리 내린 강한 평화주의=반군사주의를 향한 지향이 있다는 것을 논했다. 이 평화주의를 향한 지향은, 류큐 왕국 이래 '비무'의 전통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그 후의 역사적 체험 속에서 더욱 강인하게 형성되어 온 것이다. 그중에서도 오키나와전투는 근대의 오키나와 사람들이 강요당한 '차별'과 '배제'를 내포한 '동화'와 '황민화'의 비극적 결말이고, 오키나와 근대사의 불행한 총결산이라고도 할 만한 사건이었다. 일본 본토의 방위나 국체(천황제) 유지를 위한 '사석' 작전으로 전쟁을 감당해야 했던 그 비참한 지상전 체험을 통해 오키나와 사람들은 '군대는 주민을 지키지 않는다', '생명이 보물'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이어진 미군 통치라는 '고난의 현대사'(沖繩県, 1996)를 거치는 동안 오키나와 사람들은 류큐 왕국 이래 '비무의 문화'라는 지하수맥과 같은 전통을 배양 기반 내지는 재발굴의 대상으로 여기며, 현재의 평화주의 심성과 사상을 일궈낼 수 있었다.

오늘날 평화주의=반군사주의의 심성과 사상은, 나고 시 헤노코의 미군기지 건설 계획에 대한 10년 이상에 걸친 끈질긴 반대운동, 철저한 '비폭력 저항운동' 속에서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올(all)오키나와'나 '이데올로기보다 아이덴티티'를 선전 구호로 2014년 11월 현지사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현재의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현정과, 그것을 지지하는 오키나와의 대다수의 민의, 그 민의를 따르는 자세를 견지하는 현 내 매체들의 논조 등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⁹

전후 70년인 2015년,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방향을 크게 돌리려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 글 집필 단계에서 일본 정부는 헤노코 앞바다를 매립하는 본격적인 공사를 2015년 가을에라도 강행할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고, 오키나와는 또 큰 기로에 서 있다. '분쟁과 평화의 기로', 그 최종적인 위기 국면에 내몰렸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일본 본토의 양심적인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의 지식인이나 군사주의 극복을 통해 평화를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오키나와를 이해하고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서서히 확산하고 있으며, 궁지에

⁹ 예를 들면 琉球新報社論說委員會(2014) 참조.

몰린 오키나와 현민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있다.

투고일: 2015년 11월 15일 | 심사일: 2016년 1월 22일 | 게재확정일: 2016년 2월 7일

참고문헌

- 明田川融. 2008. 『沖繩基地問題の歴史: 非武の島, 戦の島』. 東京: みすず書房.
- 新川明. 1973. 『異族と天皇の国家: 沖繩民衆史への試み』. 東京: 二月社.
- 安良城盛昭. 1980. “琉球処分論.” 『新・沖繩史論』. 沖繩: 沖繩タイムス社.
- 新崎盛暉. 2001. 『現代日本と沖繩』. 東京: 山川出版.
- . 2012. 『沖繩現代史家新崎盛暉が説く構造的沖繩差別』. 東京: 高文研.
- 伊波普猷. 1914. “序に代へて: 琉球処分は一種の奴隷解放也.” 喜舎場朝賢. 『琉球見聞録』. 沖繩: 親泊朝翟.
- 大熊良一 訳著. 1979. 『ブロッサム号来琉記』. 東京: 第一書房.
- 大熊良一 訳著. 1989. 『セント・ヘレナのナポレオン』. 東京: 近藤出版社.
- 大城将保. 1988. 『改訂版 沖繩戦: 民衆の目でとらえる[戦争]』. 東京: 高文研.
- 太田朝敷. 1927. “沖繩県政五十年 初版”. 1993. 『太田朝敷選集 上巻』. 東京: 第一書房.
- 大田昌秀. 1972. 『沖繩のこころ: 沖繩戦と私』. 東京: 岩波書店.
- . 2000. 『沖繩の決断』. 東京: 朝日新聞社.
- . 2014. 『大田昌秀が説く沖繩戦の深層』. 東京: 高文研.
- 大田昌秀・新川明・稲嶺恵一・新崎盛暉. 2013. 『沖繩の自立と日本: 「復帰」四〇年の問
いかけ』. 東京: 岩波書店.
- 沖繩県 編. 1996. 『沖繩苦難の現代史: 代理署名拒否訴訟準備書面より』. 東京: 岩波書
店.
- 沖繩県教育庁文化財課史料編集班. 2012. 『沖繩県史 資料編 23 沖繩戦日本軍史料 沖
繩戦6』. 沖繩県教育委員会.
- 喜舎場朝賢. 1977. 『琉球見聞録』(再版). 東京: 至言社.
- 金城正篤. 1978. 『琉球処分論』. 沖繩: 沖繩タイムス社.
- 久場政彦. 1971. “なぜ『沖繩方式』か.” 『中央公論』 1971年 9月号, 138-147. 東京: 中央公
論社.

- 佐道明広. 2014. 『沖繩現代政治史: 「自立」をめぐる攻防』. 東京: 吉田書店.
- 平恒次. 1970. “『琉球人』は訴える.” 『中央公論』 1970年 11月号, 96-108. 東京: 中央公論社.
- 平良好利. 2012. 『戦後沖繩と米軍基地: 「受容」と「拒絶」のはざままで 一九四五~七二年』. 東京: 法政大学出版局.
- 仲地博. 2010. “沖繩自立構想の歴史的展開.” 西川潤・松島泰勝・本浜秀彦 編. 『島嶼沖繩の内発的發展』. 東京: 藤原書店.
- 波平恒男. 2011. “教育と同化の論理.” 『沖繩県史(各論編5)近代』. 沖繩県教育委員会.
- . 2014. 『近代東アジア史のなかの琉球併合: 中華世界秩序から植民地帝国日本へ』. 東京: 岩波書店.
- 西里喜行 編. 1992. 『琉球救国請願書集成』. 東京: 法政大学沖繩文化研究所.
- 西里喜行. 2005. 『清末中琉日関係史の研究』. 京都: 京都大学学術出版会.
- 東恩納寛惇. 1950. “概説沖繩史 初版.” 1978. 『東恩納寛惇全集 1』. 東京: 第一書房.
- 星野英一. 2013. “沖繩の米軍基地と人間の安全保障.” 『政策科学・国際関係論集』 第15号, 23-59.
- 松田道之. 1879. “琉球処分.” 下村富士男 編. 1962. 『明治文化資料叢書第四卷外交編』. 東京: 風間書房.
- 宮里政玄・新崎盛暉・我部政明 編著. 2009. 『沖繩「自立」への道を求めて: 基地・経済・自治の視角から』. 東京: 高文研.
- 吉田敏浩. 2012. 『沖繩: 日本で最も戦場に近い場所』. 東京: 毎日新聞社.
- 与那国暹. 2005. 『沖繩・反戦平和意識の形成』. 東京: 新泉社.
- 琉球新報社論説委員会. 2014. 『琉球新報が伝える沖繩の「論理」と「肝心」』. 東京: 高文研.
- 琉球政府 編. 1965. 『沖繩県史 第14巻 資料編4』. 琉球政府.
- Hall, Basil. 1818.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the Great Loo-Choo Island in the Japan Sea*. London: John Murray(春名徹 訳. 1989. 『朝鮮・琉球航海記』. 東京: 岩波書店).
- McLeod, John. 1817. *Narrative of a Voyage, in His Majesty's Late Ship Alceste to the Yellow Sea, Along the Coast of Corea, and Trough Its Numerous Hitherto Undiscovered Islands, to the Island of Lewchew; With an Account of Her Shipwreck in the Straits of Gaspar*. London: John Murray(大浜信泉 訳. 1999. 『アルセスト号朝鮮・琉球航海記』. 沖繩: 榕樹書林).
- 沖繩県ウェブサイト「沖繩21世紀ビジョン」>沖繩21世紀ビジョン本編はこちら」. <http://www.kci.go.kr>

www.pref.okinawa.jp/21vision/archives2/okinawa21_201004.pdf(최종 검색
일: 2015. 8. 31).

Abstract

Okinawa's Historical Experiences and “Anti-military” Ideals of Peace

Tsuneo Namihira Ryukyu University

This paper discusses Okinawa's historical experiences and the resultant “Anti-military” ideals of peace, with two main points of critical focus. Firstly, what has hitherto been referred to as the “Disposal of Ryukyu” should be reinstated and reevaluated as the “Annexation of Ryukyu” with the change of perspective from the annexing party (the Meiji Government) to the annexed (Ryukyu). Second, there is a need for an appropriate placement of the event of the annexation within the grand scheme of a rapidly modernizing East Asia. When analyzed in the context of the historical transition from the old Sino-centric international order to the new order of modern Japanese imperialism, it can quickly be discerned that the two annexations, that of Ryukyu and Korea, by Japan are actually very similar. It is often mentioned that Okinawa and Jeju Island are much alike. As such, the common experiences of oppression and hardship that pierce both modern histories, are profoundly interrelated with the issues of the Cold War divisions in East Asia, and Korea in particular, and also with the recent American (and allied) military strategy adjustments in the Asia-Pacific area.

In Okinawa there is a deeply-rooted historical view and widespread pride that the Ryukyu kingdom was a “Courteous and Refined Country” with a “pacifist culture.” Given the annexation by Meiji and assimilation into Japan, the people of Okinawa have had mixed experiences as they

faced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by the mainstream Japanese, which has been replicated throughout the war, the post-war American occupation and restoration movement, and continued up to today. The current Japanese government is forcing construction around Henoko despite opposition, and Okinawa stands at a major crossroads again. One can even go so far as to claim that the island is at a critical point, facing a crisis between peace and conflict. But there are also many conscientious citizens in Japan and intellectuals overseas who are sending their support for Okinawa's dream of achieving peace by overcoming militarism.

Keywords | Okinawa, annexation of Ryukyu, “anti-militaristic” ideals of peace, historical experiences, military base